

월요광장



윤 희 철
성태도시리빙랩 소장

작년 초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A씨는 연말 인사고과에서 ‘양’을 받았다. 수우미양가 중 ‘양’, 명백한 하위 등급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누구 보다 성실하게 일해왔다. 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만회 하고자 더 열심히, 더 세심하게, 더 조심스럽게 일했 다. 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육아휴직이 조직에 피해야 하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평가 결과는 그의 기대와 달랐다. 조직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당신은 아직도 완전히 복귀하지 않은 사 랑이다.”

이 평가가 주는 충격은 단지 심리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인사고과 결과는 성과급과 인센티브, 향후 연 봉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승진 경쟁에서 도 불리해진다. 결국 ‘양’이라는 두 글자는 수백만원의 수입 손실로 이어지고 복귀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 는 현실적인 부담이 된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은 보 장되어 있지만 휴직 이후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호받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과 편견 속에 서 감점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2024년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

성평등한 도시, ‘양’이라는 평가로 답하지 마라

직자들은 복귀 이후 평가, 보상, 배치, 승진 등 모든 영 역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불이 익을 더 자주 겪었고 여전히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돌 본다’는 고정관념이 조직 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 다. 육아휴직은 제도적으로 성 중립적이지만 실제 사 회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 결과 복귀자 는 늘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평가에서는 감점 대상이 된다. 이는 직장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한 위계와 편 견의 실체를 드러낸다.

이런 현실은 책임을 복귀자 개인에게 떠넘긴다. “아 이 낳고도 일하려면 그 정도 감수해야지”, “공백이 있 었으니 어쩔 수 없잖아”라는 말들이 그렇다. 하지만 이 런 시선은 복귀자의 노력과 시간을 평가절하하고 육아 와 노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퍼 뜨린다. 그 결과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선택을 망설이 게 된다. 손해와 불이익이 명확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 우는 것은 더 이상 삶의 기쁨이 아닌 ‘계산’의 대상이 된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근로의욕의 상실이다. 복귀자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낮은 평가를 받는다면 다음엔 굳 이 그렇게까지 애쓸 이유가 없어진다. 이는 개인의 의 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점이 예상되는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좌절감이다. 복귀자는 점점 조직 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직장은 이들을 ‘성의’는 있지만 실적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육아휴직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닌 짐이 되고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회피해야 할 위 협이 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

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다.

이제 우리는 성평등한 도시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보육시설이 많고 부모교 육 프로그램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다녀 온 사람이 경력에서 불이익 없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도시가 성평등한 도시다. 복귀자에게는 감점 대신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고 인센티브 구조 속에 는 차별이 아닌 배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 제도 역 시 돌봄 경험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 다. 경력의 공백은 결손이 아닌 경험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복귀자는 다시 경력 경로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설 수 있어야 한다.

아이 낳는 것을 장려한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는 않는다. 부모가 되는 선택을 한 이후의 삶이 존중받 을 때 비로소 ‘선택 가능한 삶’이 된다. 육아휴직을 다 녀온 사람이 감점이 아니라 공감을 받는 도시, 그곳에 서만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자랄 수 있다. 성평등은 단 지 선언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일상 구조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조의 출발점은 복귀자에게 허락된 ‘두 번째 출발선’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받아야 한다. 육아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응답하 고 있는가. 인사고과의 ‘양’으로 답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라는 현대의 마음으 로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저출생 시대, 우리 가 설계해야 할 도시의 진짜 얼굴이다. 그 얼굴이 따 뜻할 때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수필의 향기



김 향 남
수필가

내가 꿈꾸는 집의 설계도는 의외로 간결하다. 앞을 가리는 것 없이 훤히 트인 남향의 창, 그 하나면 족하 다. 창 너머로 넓은 들만이 지평선을 그리고 있거나, 산 마루의 능선이 말의 잔등처럼 굽이쳐 흐른다면 더할 나 위 없겠다. 그것은 풍경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쏟아지는 빛의 순도를 온전히 지켜내고 싶은 마음 때문 이다.

지금 이곳은 전경은 좋으나 햇살은 인색한 편이다. 해는 아침나절 거실 한쪽에 잠깐 머물다 이내 창틀을 넘어 바깥 사라진다. 그 짧은 방문을 농칠새라 나는 서 돌리 소파에 몸을 묻는다. 비스듬히 들이치는 별이 몸 위에 닿는 순간, 나는 문득 거대한 무대 한가운데 서 있 는 기분이 든다. 역겹의 시간을 건너온 빛이 이 순간을 위해 도착한 것처럼, 오직 나만을 비추는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 같다.

그 뜨끈한 감각은 단순한 물리적 열기가 아니다. 그 것은 우주가 보내는 가장 내밀한 안부이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한 연결의 신호다. 빛이 나를 감싸 안을 때, 나는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 낀다. 그 안온함은 기억 저편, 고향집 안방의 아랫목이

스포츠라이트

나 엄마의 자궁 속 같은 원형적 파스함을 달아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조용히 무장을 풀고 존재 자체로 놓인 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그늘을 품고 살아간다. 타 인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사각지대, 오래 닫아온 방 처럼 녹록해진 내면의 공간 말이다. 햇살은 그런 곳을 가장 먼저 찾아낸다. 별이 드는 자리에 가만히 몸을 누 이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투명한 평안이 고인다. 빛이 몸을 통과하는 그 짧은 순간은 어지러운 하루 속에서 나를 다시 제자 리로 돌려놓는, 가장 고요한 의식이다.

두어 해 전 시골에 정착한 지인의 집을 찾았다. 머리 에 수건을 동여매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그는 영락없 는 시골 촌부의 모습이었다. 도시의 세련미는 사라졌 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삶의 속도를 몸이 먼저 배운 사람처럼 보였다.

작고 소박한 집 마당에는 개 두 마리와 길고양이 열 한 마리가 천연스레 어울려 있고, 마당가에는 자잘한 꽃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피어 있었다. 텃밭에서 딱 따 온 채소들은 그의 부를 증명하는 푸른 화병 같았다. 무 엇보다 부러웠던 건 그 집에 머무는 햇살이었다. 낮은 울타리 너머로 툇 터진 들만큼 드넓은 하늘과 그 사이 를 가득 채운 금빛 햇살. 그 집의 햇살은 단순히 ‘드는 것’이 아니라 노상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독 화창한 날이어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빛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지만, 빛과 함께 그는 더욱 풍요로워 보 였다. 그 풍경 속에서 그는 무대의 주인공처럼, 자신만

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갈수록 치솟는 건물들에 창밖의 풍경은 생략되는 게 너무 많다. 햇살은 정해진 시간표처럼 잠깐 들렀다가 사라질 뿐이다. 하여, 언제부턴가 나는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묻게 되었다. 그 집에는 하루에 얼마나 깊은 별이 머무는가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화려한 이력이나 축적된 소유가 아니라 그 빛을 감각으로 받아내는 마음의 여백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햇 별이나 가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던 디오게네스처럼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공간인지도 모르겠다.

집이란 생명의 요람인 동시에 삶의 ‘품’이다. 나를 받 아들이고 품어주는 우주의 작은 성소 같은 공간. 그곳 에서 햇살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때면 새롭 게 건네오는 특별한 성찬이 된다. 햇살 가득한 집에는 마음의 그늘이 오래 머물 자리가 없다. 아침나절 잠깐 스치는 햇살에도 이토록 마음이 환해지는데, 하루 대 부분을 그 빛 속에 살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더 온화해 질까.

언젠가 그런 집에 살게 된다면, 나는 창가에 앉아 구 태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몸 구석구석으로 스 머드는 빛을 느끼며, 오래된 아랫목의 기억 속에서 평 화를 누릴 것이다.

하지만 돌아켜보면 나는 이미 마음속에 햇살로 지은 집 한 채를 품고 있다. 짧은 아침 별 앞에 멈춰 서는 순 간마다, 나는 우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 빛 아 래에서, 가장 조용하고 은헤로운 생의 한 페이지는 이 미 쓰이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 정치적 결단만으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주민자치회가 있고 공정회도 열린다고 항변하겠지만, 이 역시 관제(官製)의 성격이 짙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 식적 절차만 밟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 근 발의된 특별법안에 공론화 방식과 협의체 구성이 명 시된 점은 고무적이나, 현재 시·도가 주도하는 방식에 는 통합을 전제로 한 홍보원주이거나 엘리트층의 파편 화된 입장만 대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다. 그렇다 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식 또한 그 이름에 걸맞 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효율성을 위해 통합을 꾀할 수 는 있으나 결정의 주체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아닌 시·도민이어야 한다. 일회성 투표나 단순 여론조사가 아 니라 시민들이 깊이 있게 숙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 론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지역·성별·연령별 인 구 비례를 맞춘 균형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장단 점을 낱알이 들여다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신중한 과 정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성급히 밀어붙인 통합은 필연 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벌써 광주시민은 역사·문화적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고, 전남도민은 흡 수 통합에 따른 농어촌 소멸을 걱정한다. 이런 우려를 방지한 채로 통합을 서두른다면 행정은 통합될지언 정, 시민에게는 오히려 갈등 요인만 제공한 꼴이 될 것

이다.

이 문제는 전문가 몇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주권자인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집단지성 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주권자인 주민들이 모여 토론 하고 숙의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의 견을 모아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시민의회 (Citizen’s Assembly)를 구성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 식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라야 부작 용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심리적 통합’까지 이룰 수 있 다.

시민의회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유효성이 확인되 었다. 국가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사례가 있 었고, 광주시에서도 ‘지하철 2호선 시민공론화위원회’ 를 통해 극심한 갈등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 인구비례 에 맞춰 무작위 추천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다양한 관점 의 정보를 학습하고 숙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이 방식 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민주성이 높은 제도로 인정 을 받고 있다.

오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라도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은 줄이고 효과는 높 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헌법 에 보장된 국민주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 민주제를 시행한다면, 광주·전남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성지로서 그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민주·혁신 합당 추진 충분한 공론과정 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정가의 핫 이슈로 부상했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조국혁신당을 향 해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 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고 합 당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 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며 합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은 6·3 지방선거 압 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국정 운 영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지방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당권 경쟁에서 주 도권을 쥐려는 정 대표의 개인적인 목표 도 작용했다고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입 장에선 자강론에도 불구하고 3~4%의 낮 은 지지율에 갇혀 독자생존의 위기에 처 한 상황에서 돌파구로 합당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두 당의 합당 추진은 여론발 정계 개편 의 신호탄으로 소나무당 등 진보성향의 여타 군소 정당의 통합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진보성향 지지자들의 여론도 나쁘 지 않다. 다만 대표 주도로 공론화 없이 추 진하고 있다는 당내 반발은 넘어야 할 산 이다.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하 나 사라진다는 점에서 합당을 무작정 반 길 수만은 없다. 민주당 텃밭이란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민주당이 합당 성사로 이 전자편 경쟁 없이 또다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일을 유권자들은 경계하고 있다.

합당이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추진되거 나 지분 나뉠먹기로 비친다면 어떤 성과 도 기대할 수 없다.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 도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두 당 모두 당원은 물론 주민들의 목소 리를 경청하는 것만이 잡음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자 지지자에 대한 최소한 의 예의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30년 개교 예정 전남의대 최대한 앞당겨야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개 교가 2030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 정심)가 최근 4차 회의를 갖고 전남권 의 대 설립에 정원 100명을 배정하는 대신 개교 시점을 2030년으로 논의한 결과 다.

의대 정원을 100명 배정한 것은 현행할 일이지만 개교 시점이 전남 도민들이 요 구한 2027년을 넘어 전남도가 수정 요구 한 2028년보다도 2년이나 늦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남도는 보정심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정원 배정은 환영하면서도 개교 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자인 도민들의 고통타임 확보를 위해서도 2028년으로 개교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보정심은 다음달 초 최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인데 교육부와 복지 부간 협의 과정에서 전남권 국립 의대 개

교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은 목표대과 순천대의 통 합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두 대학은 오래 전부터 개별적으로 국립 의대 유치에 나 섰다가 도민들의 뜻에 따라 통합 유치로 선회했고 대학 통합이란 더 큰 목표를 향 해 나아가고 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통합 의결을 이끌어 냈 는데 의대 개교가 예정보다 3년 가량 늦 어진다면 대학 통합의 구심점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필수의료의 붕괴 로 응급·중증 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하 는 사례가 많은데 의대 개교가 늦어지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도민들의 생명이 더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2027년 개교 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늦어도 2028년 개교는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그린란드(Greenland)는 면적이 216 만6000㎢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이다. ‘녹색의 땅’이라는 국명과 달리 국토 80% 이상이 얼음으로 덮혀 있는 아이스란 드(Iceland)로, 북극해와 대서양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연합 국을 이뤘던 18세기에 그린란드를 식민지 로 삼았다. 1814년 킬 조약(Treaty of Kiel)으로 노르웨이와 분리된 이후 덴마 크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토적 주권을 행 사했다. 1894년 동부 해안에 최초로 덴마 크인 정착촌을 건설했고 민간단체는 선교와 무역 기지를 건설했다. 1905 년에는 내무장관령으로

국과 다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 장했다. 노르웨이는 “점령을 선언할 때 당 해 지역은 덴마크의 식민지 범위 밖의 무 주지(無主地)였다”고 강변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33년 덴마크의 손을 들어줬다. “당해 지역에 대 해 주권자로 행동하려는 의사와 그러한 의사에 기초하는 권능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행사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 만일 타국이 당해 영역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 고 있다면, 그러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 다”고 판시했다. 우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 본에 맞서 근거로 내세 우는 실효제 점유의 대

그린란드와 독도

표적 사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 하려는 야욕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해상 안보와 천연자 원, 물류 지배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트럼프 정책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 은 패권주의이자 제국주의적 시각에 뿌리 를 두고 있다. 그린란드 사태는 결코 만나 라 이야기가 아니다.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기 고



이 현 중
전국시민의회포럼 상임대표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는 통합 특별시에 자치권을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 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통합을 하면 많은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낙관도 쏟아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 “이 통합이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라 떠들지만, 그것이 정치인들의 권한 강 화에 그치고 주민들의 참정권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 면 무의미한 일이다.

예산 지원 역시 마 찬가지다. 그 혜택이 일부 토호 사 업가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주민들이 소외된다면, 이는 통합을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과정은 늘 그래왔다. 이번에도 자치권의 강화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선에서 멈추고, 늘어난 예산은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 결과로 귀결될 가 능성이 커 보인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대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